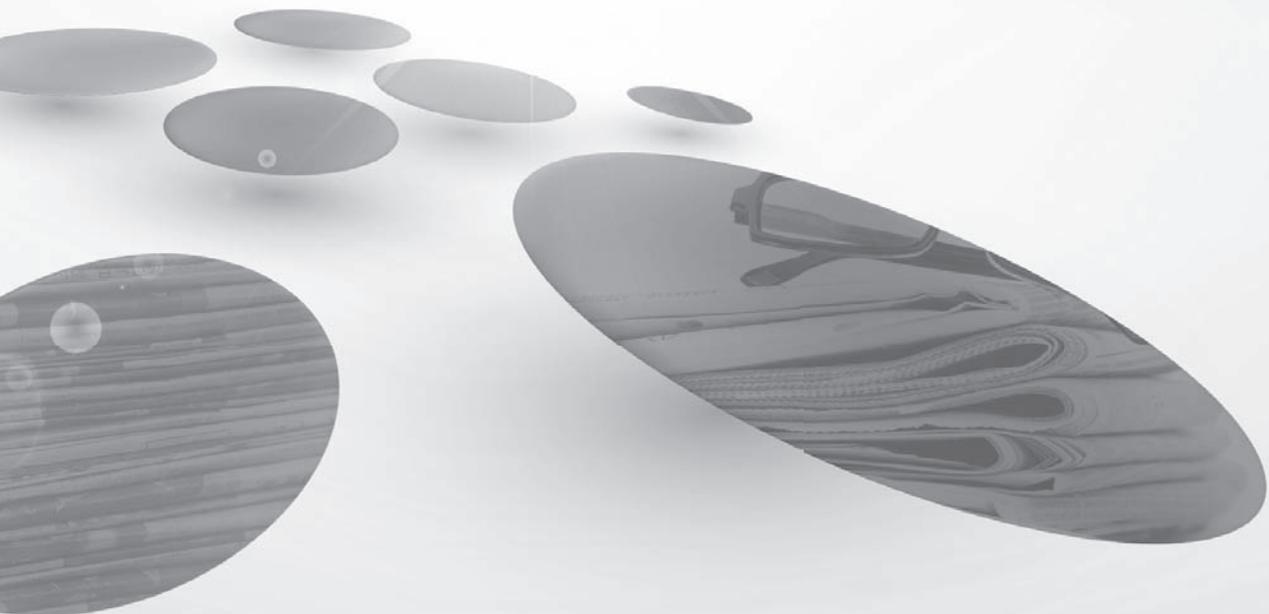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 2011-120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문>

한국경제 2011년 9월 19일자 A31면 「“5년 내 한반도 큰 지진 올 수 있다”…기상청 경고/진도 6이상때 도시마비…대책 서둘러야/백두산 화산도 폭발조짐…연구인력 급파」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년 안에 최소한 규모 5.0을 넘는 지진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기상청 고위 관계자) 기상청이 한반도 지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기상청 고위 관계자가 대지진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는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규모 6.0 이상이면 도시기능 마비

기상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는 10년 주기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며 “5년 안에 6.0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반도에선 1978년 충남 홍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994년(전남 홍도 4.9)과 2004년(경북 울진 5.2)에서 잇따라 규모 5.0 안팎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일본에선 규모 6.0 정도면 대지진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 대도시에서 그 정도 지진이면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금까지 지진에 관한 한 안전지대였던 한반도에 5년 내 규모 6.0을 넘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규모가 6.0 이상이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하고 한국의 대도시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송전탑이 끊어지고 송전탑이 파괴될 경우를 가정해 ‘대혼란 가능성’도 제기했다. 거기에다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는 이 같은 예측을 ‘기상청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빌어 보도했다.

지진 안전지대에 살아왔던 한국 국민들에게 이 같은 보도는 충격적이며 국민들로서는 걱정과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보도가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 신뢰성이 궁금하게 마련이다. 보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그 내용에서 정확성·객관성을 기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취재원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

독자들은 이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보도의 내용 못지않게 ‘과연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취재원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어 한다. 이는 독자의 권리이며 이에 부응하는 것은 신문의 의무사항이다.

이런 사안의 취재과정에서, 만약 취재원이 끝까지 익명을 요구한다면 기자는 그의 소속 기관뿐 아니라 일반적 지위라도 밝혀야 한다고 신문윤리강령은 강조하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동 화

〈주문〉

서울신문 2011년 10월 13일자 11면 「시작은 ‘佛 상젤리제’… 끝은 돌의자만 덩그러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글로벌 스트리트’(Global Street)에는 돌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글로벌 스트리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세계적인 명물거리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2009년 7월 중구 무교동에 만들어졌다. 연구용역비만 1억원이 넘게 든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현재 무교동 어디에서도 명물로 불릴만한 이국적인 거리는 없다. 길가 보행로에 놓인 일반인 무릎 높이의 네모난 돌의자가 전부다. 돌의자 옆면에는 각 나라 국기가 새겨져 있을 뿐이다. “이곳이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조성한 글로벌 스트리트”라고 하자 이상하다는 듯 “왜 그렇게 부르느냐”고 되물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개월간 ‘서울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됐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시가 서울 중구 무교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세계적 명물거리인 ‘글로벌 스트리트’를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결과적으로 나라 이름을 새긴 돌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게 요지다. 그런데 기

사를 보면, 이 거리가 왜 글로벌 스트리트인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시민들, 그리고 해명하는 서울시 관계자 등 등장인물 모두가 익명이다. 이는 보도 기사에서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하며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도록 한 신문윤리강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2년 1월 14일자 21면 「2012 CES 폐막…세계는 이재용 사장을 주목했다/무섭도록 침착…후계자 위용 드러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종일관 진지했다. 방문객이 다가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친근하게 담소를 나눴다. 그런데 경쟁사의 신제품들을 살펴 볼 때만큼은 달랐다. 제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연출했다. 2012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COO). 그는 행사기간 동안 단 한 치의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삼성그룹을 이끌어 갈 후계자로서 위용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황태자 이재용의 광폭행보

13일(미국 현지시간) 막을 내린 2012 CES에서 이재용 사장은 ‘이슈메이커’

였다. 전 세계 IT 가전업체들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삼성 전자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경영자로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삼성전자의 향후 경영전략을 읽어내기 위한 요량에서다. 글로벌 IT전자업체로 성장한 삼성그룹의 후계자란 꼬리표의 값은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세계 스마트TV와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 그러나 그는 무섭도록 침착했다. 차세대 삼성의 주역으로서 자신감도 그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장의 그룹 내 위상은 지난해부터 크게 달라졌다. 주요 경영전략 수립 과정의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문제가 발생할 때면 직접 해결에 나섰다.

2010년 소니가 샤프와 함께 차세대 LCD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을 당시 이 사장은 하워드 스트링거 회장과의 미팅을 통해 이를 정면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애플과의 소송전으로 삼성전자의 CPU, 메모리 등 핵심 부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팀쿡 애플 CEO를 만나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약속을 받아 낸 것도 그다. 이 사장의 행보에 글로벌 IT가전 업체의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이재용 사장은 11일(현지시간) 폴 오텔리니 인텔 CEO와 1시간 동안 미팅을 가졌다.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와 I 기기의 핵심인 칩셋을 만드는 글로벌 최대 기업 수장의 만남. 둘의 만남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생태계를 변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커 보인다.

인텔은 최근 새롭게 모바일 칩셋 사업에 진출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칩셋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현재 영국 암(ARM)사 기반의 퀄컴 칩셋과 독자 개발한 엑시노스 칩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폴 오텔리니는 2월에 열리는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에서 한차례 회동을 할 예정이다.

▶기술력 기반, 콘텐츠 확보 '올인'

삼성전자는 스마트TV를 통해 각종 첨단 기술을 대거 공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실제 2012 CES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였다고 해도 과언 아니었다. 행사 기간 최대 이슈였던 스마트TV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다. 55인치 슈퍼

OLED TV가 ‘CES 최고 혁신상(Best of CES Innovations)’을 수상했고, 파퓰러 사이언스(Popular Science), 스티프Stuff 매거진, G4 TV 등 영향력 있는 주요 매체로부터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CES 행사를 주최하는 가전제품제조자협회(CEA)는 “한 번 삼성 OLED TV 앞에 서보고 나면, 다른 보통 TV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TV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스마트시대의 핵심 주역이 됐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이다. 다만 다양한 콘텐츠 측면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은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의 DNA를 소프트웨어 분야로 어떻게 이식하느냐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단서가 될 전망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2 CES’ 행사 현장의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동정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위 기사는 현장 스케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작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현장에 가지도 않고 쓴 현장 스케치 기사는 취재원과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이 기사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아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 2011-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1년 4월 14일자 A17면 「4·19 행사에 중고생 동원 논란/친노단체 참여 '민주 올레'/서울교육청 "체험활동 인정"/교육계 "학생참여 부적절"」이라고 한 제목과 그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친노 모임인 시민주권(상임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 주관했던 '4·19 민주올레 행사'를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16일 오후에 열리는 이 행사에 중고교생이 참여하면 창의체험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최근 일선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민주시민교육팀을 만든 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에 민주올레 행사를 포함시켰다. 올해는 시민주권이 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개막식 때 박노현 교육감과 이 전 국무총리가 환영 인사를 한다.

민주올레 행사는 4·19혁명 당시 역사현장을 걸으며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큰 역할을 했던 교수단 시위대의 출발지 마로니에공원에서 출발해 혜화경찰서와 탑골공원 등을 돌게 된다.

지난해에는 이 전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세균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야권 인사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권은 무능력한 부패 집단”이라고 했고, 일부 참가자는 “이 대통령 해야하라”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교육계에서는 집회 성격의 행사를 교육청이 주최하고 학생 참여를 권장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해와 달리 정치색을 일절 배제한 순수한 학생 행사다. 가족과 함께 중고교생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체험활동으로 인정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올해 4·19행사에 중고생이 참여하면 체험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교육계에서 ‘교육청이 주최하고 학생참여를 권장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서술하고 제목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어떤 인사, 어떤 단체가 반대하는지 그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교육계’라는 막연한 익명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제3자를 비방할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전문 및 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과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